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윤 덕 민**

목 차

1. 서 언
2. 중국의 급부상
3.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4. 한반도 정세
5. 지역 안전의 세가지 도전
6. 결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1. 서 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동아시아 정세는 서구 제국주의의 진출과 함께 중화질서가 여지없이 붕괴되는 질서의 대변혁기에 처한 바 있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다시 백년만에 동북아 질서는 냉전질서가 무너지면서 질서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 질서가 변혁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동서 냉전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냉전종결과 함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백년전 동양은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냉전종결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증유의 금융위기에 직면하거나 경제적 침체를 겪는 등 적응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현재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즈음하여 국내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응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략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소멸로 대변되는 냉전의 해체이다. 동아시아의 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중·

* 본 논문은 2002년 5월 3일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임.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일의 느슨한 연합 태세에 의해 강력한 극동 소련군을 견제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오랜동안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소련제국이 소멸하여 구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대폭 줄어든 상황은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의 부상 등도 지역의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지역의 세력균형에 있어서 핵심적이었던 미소 양극구도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은 미소 냉전구도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로서 미중일 신삼각 체제가 부상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의 비핵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심각한 경제식량난에 의한 체제 불안과 함께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본고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한반도 정세 그리고 9.11 테러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세가지 도전을 평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특히 한반도 통일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중국의 급부상

지역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개방·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세계은행(IMF/IBRD)은 중국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중국 스스로도 2020년까지 종합국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울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구 12억의 중국경제가 21세기중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로 부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경쟁력, 기술력 수준에서 명실공히 경제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기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개혁개방 노선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중 중국은 경제대국의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하히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자신의 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은 90년대 들어 국방비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거의 3배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의

예산이 1.3배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중국의 국방예산은 경제성장을 능가하는 평균 13%대의 성장을 해왔으며, 최근 2년간에는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국방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의 국방예산(추정치)은 2001년 이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은 핵전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투사능력을 갖는 병기를 개발·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핵미사일의 다탄두화와 정확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16기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적재할 수 있는 신형 핵잠수함(SSBN) 개발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성능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漢급 공격형 핵잠수함, 루하이급 대형 미사일 구축함을 개발 배치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SU27/SU30 전폭기, 장사정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소보르메니급 미사일 구축함(7000톤), 킬로급 잠수함 등을 도입하여 장거리 투사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핵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며,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21세기중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하나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장래가 장미빛만은 아니다. 중국의 장래는 여하히 다원주의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아시아의 민주화에서 목격했듯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공산당 일당체제로 국민들의 다원주의적 정치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처방은 민족주의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해 무력시위 등 과잉반응을 하고, 대만분리독립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공산당 중심으로 국민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민족주의 경향과 함께 중국의 외교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국강병, 세력균형, 주권을 강조하는 19세기형 현실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근대사에 있어서 쓰라린 좌절을 겪었던 중국은 「부국강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의 부국강병정책은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급부상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WTO 가입이후 세계경제에 자신의 경제체제를 여하히 연착륙시키고 일당체제에서 벗어나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중국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이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재앙이 될 것이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과 같은 올림픽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냉전붕괴는 일본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90년대 초반 엔화가 1달러당 70엔대까지 올라갔을 때, 일본경제는 미국경제를 추월하였으며, 강력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함께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대국의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일본내에는 냉전이후 일본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보통국가」,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小くてきらりと輝る國)」,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global civilian power) 등등 유력 정계 리더들과 지식인들은 냉전 이후 일본이 나가야할 진로를 앞을 다투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일본의 모습은 냉전직후의 희망찬 모습과 거리가 있다.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 제도적 피로와 함께, 세계화의 대처 미흡,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중국의 급부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일본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침체는 지역정세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명치유신 직전과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의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어떤 선진국들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장의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장래의 비전이 없는 가운데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가 초래한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90-97년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17조 엔(약 11조1700억불)의 자산이 사라졌으며, 이는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에 비유되는 일본판 '잃어버린 10년'을 의미한다. 경기후퇴로 세입이 줄고 경기 자극을 위해 감세와 함께 공공투자에 재정자금을 투입한 결과, 일본의 재정적자 폭은 위험수위를 넘어 정부 채무의 잔고는 GDP의 105%에 달하며, 제2정부예산으로 볼 수 있는 재정투융자부문을 포함하면 사실상 GDP의 2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야자와 재무상은 지난 3월 공공부채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붕괴에 거의 근접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의 어려움은 많은 부분 일본경제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잃어버린 10년」에 비유되는 장기 경제 침체는 일본국민의 좌절감과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산시킨 바 있다. 일본은 현재 냉전종결직후 이상적이고 낙관적 분위기에서 반전되어 매우 냉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좌절의 탈출구로서 민족주의로 경사되는 일이다. 물론 전후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일본의 시민사회가 충분히 우경화를 견제할 힘이 있다고 보지만,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개정 논의 등 일련의 움직임이 주변국에서는 일본사회가 우

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일동맹의 영역확대와 PKO 등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착실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공중급유기, 대형양륙함, 장거리 수송기의 개발 및 개발은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자위대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운영에 따라서는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급속히 자위대의 자유로운 활동과 활동영역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대테러특별조치법을 입안하여 자위대 파병의 길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번 테러특별조치법안에 의해, 전쟁이 아닌 대테러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일본 자위대의 영역이 지역적 차원에서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명백히 평화헌법에서 상징되는 패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國益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결국 정치군사 부문에 있어서 自主性 내지는 主權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중국의 부국강병 정책과 맞물려 지역정세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양국의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 가능성이 우려된다.

4. 한반도 정세

분단 55년, 한국전쟁 50년만에 열린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은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정상은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협의해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와 함께 스탈린식 주체경제체제의 모순으로 80년대말 이후 기능부전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의 상황은 한국전쟁 직후 상황보다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탄력없는 북한의 주체 농업정책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초래하고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100만단위의 주민이 기아와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구조적으로 대외적 지원없이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북한은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군사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방위원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한편, 군부가 정치 전면에 부각되었다. 김정일의 신체제는 식량 및 자원 부족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당·정을 대신하여 물리적 폭력과 전국적 네

트릭을 갖는 군에 의존하여 통제력의 확보를 꾀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신체제는 소위 「선군영도체제(先軍領導體制)」로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결국 선군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북한이 정상체제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기관리체제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은 체제변화의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대한 체제전환의 국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스탈린식 통제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체제의 연착륙은 어렵다. 더욱이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가운데 중국조차도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만이 세계화의 조류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극도의 폐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남북교류가 추진되고 대서방 관계개선의 여파로 점차 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넷, 팩스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 통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일 정권은 점점 증대되는 체제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스탈린식 통제경제에 입각한 현 주체체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상해방문에서 보듯이 북한은 개방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이 있다고 보지만, 체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개방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개혁적 경제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제2 천리마 대약진과 강제정신에 입각 대대적인 주민동원을 통해 노동력 투입의 극대화를 통한 중공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양적인 생산량 증가를 추구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노선에 대한 비판 없으며, 「과학기술 중시」외에 개혁·개방을 위한 노선이나 비전제시가 없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과 지지 기반을 주체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중심의 「선군영도체제」와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황에 단편적으로 적응해가면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5. 지역 안전의 세가지 도전

지난 9월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는 미국민은 물론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후일 역사가들은 미국에 대한 동시 다발 테러사건이 진주만 사건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일대사건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영향이 세계 질서는 물론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미 적지않은 영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중이다.

60년전 진주만 사건은 고립주의의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밖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세계질서는 세계의 경찰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동시다발테러 사건도 진주만 사건이상으로 미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제3세계의 일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로 미국이 중오와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주만과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즉 미국밖의 일에 개입하여 테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일국 번영으로 나가자는 고립주의 경향이 대두되는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불과 2개월만에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 조직을 분쇄하는 놀라운 힘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속출한다면, 미국민들은 이외로 고립주의를 택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더 이상 경찰관임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동아시아제국은 변화의 한가운데(最中)에 있다. 중국은 종이 호랑이이길 거부하고 2020년까지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부국강병, 세력균형, 주권을 강조하는 19세기형 현실주의를 선호한다. 한편 일본도 패전의 굴레와 「요시다 독트린」에서 벗어나 국익에 따라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테러 특별조치법에서 보듯이, 이번 테러 사건은 보통국가화 과정을 상당히 앞당기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상유지보다는 분단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이 고립주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아시아가 여전히 19세기적 세력균형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테러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평화가 세력균형이 아닌 협력안보의 지역공동체로 보장되는 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보듯이 냉전의 유산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유럽의 OSCE와 같은 정치안보 협력체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여전히 19세기적 세력균형 시각이 지역 질서를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북한문제의 지속 그리고 9.11 테러사건은 향후 지역질서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칠 것이다.

현재 요동(搖動)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도전에 여하히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동아시아는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동아시아 제국은 세계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적지않은 곤란을 겪었으며 또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금융면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지역 경제협력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의 자유무역지대

(FTA) 구상은 지역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 대만 등도 이 구상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투명성의 도전이다.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그 진로를 두고 주변국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는 일본에 대해 역시 주변국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통일한국의 진로를 두고 또한 우려한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고립주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우려한다. 결국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투명성 부족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군비증강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높으며 그 결과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된다. 따라서 상호 불신과 오해를 막고 각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험에서 보듯이 협력 안보의 공동체를 역내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셋째, 민주화의 도전이다. 급부상하는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하히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북한문제도 체제전환과 관련이 있으며 민주화는 핵심 문제이다. 민주화는 사실 투명성의 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6. 결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세계화, 투명성, 민주화의 도전을 여하히 대응할 것인지는 21세기 지역의 안정을 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도 사실상 이 세가지 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인 통일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국내외 환경을 여하히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선 북한의 변화 여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의 통일에 관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변화해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역시 민주화와 투명성의 도전이라고 본다. 북한 체제가 민주화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둘째로 주변국 문제이다. 주변 4강 모두 한반도 통일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특히 부담스러운 사태의 진전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사회주의체제의 보루로서 완충지대로 보는 19세기적 세력균형 노선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의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중국의 민주화 없이는 한국주도의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민주화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그런데 세계화는 지역의 민주화 촉진하는 요인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경제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하여 전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있어서 비민주적 요소가 세계시장경제 통합과정에 장애요소로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세계화는 중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본다면, 중국의 민주화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도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화는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만이 세계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외면할 경우 북한의 장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이 세계화 추세를 외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세계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체제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투명성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 특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